

< 3주 : 국토이용 관련 법·제도·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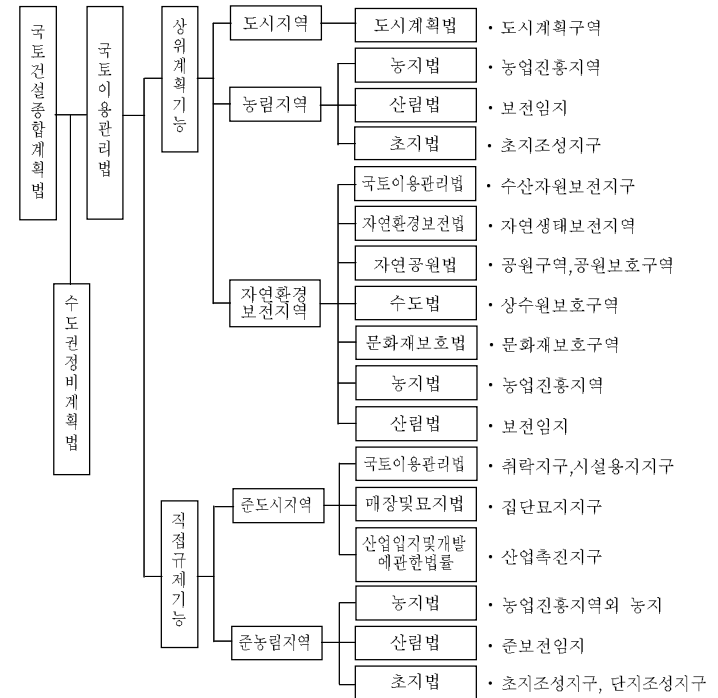
1. 국토이용관련 법·제도·계획의 내용 및 체계

1.1 국토이용관련 법·제도의 내용 및 체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이전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법률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기타 개별법 등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그 체계는 (그림 1)과 같음
-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최상위의 법이며,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상위계획기능을 담당하고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직접규제기능을 담당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함으로써 국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토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할 사업의 입지와 실시규모에 관한 목표 및 지침이 되는 기본적 장기계획인 전국건설종합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 도건설종합계획, 시·군건설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제시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충분한 기반시설의 구비능력 없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구로 인해 주택 및 교통문제의 심화, 지방과의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
 - 이 법은 수도권 정비의 기본목표와 방향, 인구 및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광역적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음
 -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이용계획 및 기타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됨.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

밀역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그림 1) 국토이용 법체제도

- 국토이용관리법
 -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결정,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국토이용관리법은 전 국토를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가지의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행위를 제한하거나 개발을 허용하고 있음

○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 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구역 내 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해당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

○ 기타

- 농지법과 산림법은 각각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임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은 자연공원법,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해 적용을 받음
- 그 밖에 80여 개별법에 의한 220여 지역·지구·구역지정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하거나 유도하고 있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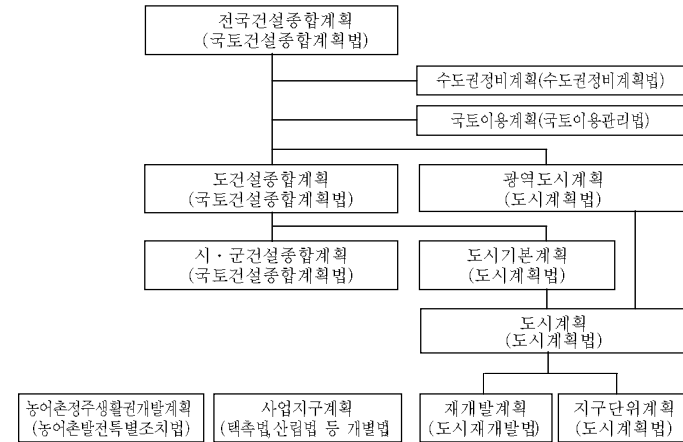
- 기존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 일부를 통합하여 국토기본법을 제정
-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2.2. 국토이용관련 계획의 내용 및 체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이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나라 공간계획의 기본체계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법을 근거로 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의 위계로 구성
- 국토건설종합계획(국토계획)
- 국토건설종합계획은 우리나라 공간계획의 최상위계획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임

- 국토계획은 국토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행정청만을 구속하는 비구속적 계획으로 여기에는 지역적 범위에 따라 전국계획, 특정지역계획, 도 계획, 시·군계획이 포함됨



(그림 2) 공간계획의 체계와 종류

○ 수도권정비계획

-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전국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되는 계획으로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하여 인구와 산업의 배치, 권역 구분 및 권역별 정비,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 환경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되는 계획임

○ 국토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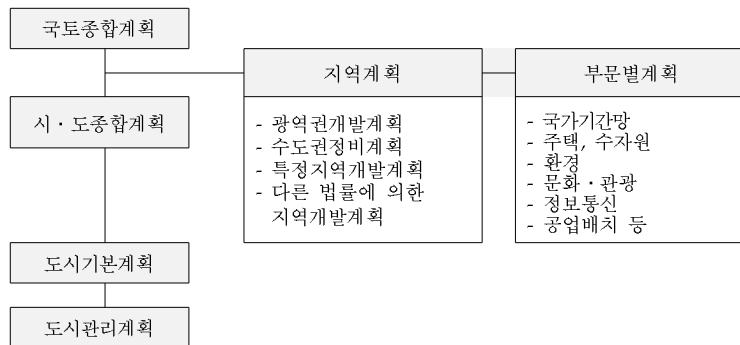
-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건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전 국토를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5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 국토이용계획의 상위계획으로는 국토건설종합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이 있으나 전자는 행정청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적 계획이고 후자는 수도권 지역만을 대

상으로 하고 있어 제한적임. 반면 국토이용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구속적 계획임. 따라서 국토이용계획은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음

-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개별 도시의 토지이용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용도별 토지배분을 통해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지역지구제,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 등의 지정과 결정을 관할하는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도시재개발법상의 도시재개발기본계획 등을 수립
- 농어촌지역에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계획 등을 수립
- 기타 특성사업 목적의 계획으로는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복합단지 및 대학단지개발계획,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계획,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오지개발촉진법 및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계획과 도서개발계획 등이 있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 건설교통부에서는 지금까지 개발위주로 되어 있던 국토이용체계에 기인한 국토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국토이용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현행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 3법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가칭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으로 개편



(그림 3) 개편된 국토계획체계

- 개편된 법에 의하면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국토이용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하여 용도지역제를 개편하고 개발허가제 및 기반시설연동제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국토관련 모든 계획을 국토계획의 틀로 통합하여 수직적으로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도시계획」으로 일원화하고 개별적으로 수립되는 광역권계획, 특정지역계획, 개발촉진지구계획, 수도권계획 등의 지역계획과 교통계획, 수자원계획, 주택계획, 산업입지계획 등의 부문별 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도시계획(도시계획구역)과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구역외)을 통합하여 모든 시·군이 관할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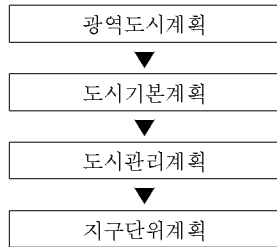
3. 도시계획의 개요

3.1. 목적 및 기본이념

- 도시계획은 공공복리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법 제1조 및 제3조)
- 그러므로 도시계획은 개발계획, 정비계획, 관리계획, 보전계획을 포함하는 종합적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3.2. 도시계획의 종류

- 도시계획은 계획의 성격과 공간·기간·내용적 범위에 따라 크게 4종류로 구분됨. 즉, 정책적이고 장기적 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집행적 계획인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됨
-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은 이들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칭하지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상의 도시계획에 대한 용어 정의와는 구별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서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만을 포함하는 의미로 정의됨



(그림 2) 도시계획종류와 체계

3.3. 도시계획의 성격 및 내용

■ 광역도시계획

-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2개 이상의 도시와 주변지역을 계획단위로 수립하며 도시간 기능을 상호 연계시켜 적정성장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수립
-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20년 단위의 지침적인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임
- 광역도시계획의 주요내용은 크게 계획의 목표와 전략, 광역도시권의 현황 및 특성,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 개편구상, 부문별 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계획, 집행 및 관리계획으로 이루어짐
- 부문별 계획에는 광역토지이용계획, 여가공간 및 녹지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방재계획, 광역교통계획, 광역공급 및 이용시설계획 등이 있음
- 현재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마산·창원·진해권 6개 권역이 계획수립 대상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도시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은 상위 계획인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지침을 수용 발전시켜 시행이 전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장기기본계획이며, 물적계획과 함께 사회 경제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계획임
- 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목표와 지표설정, 공간구조 설정, 생활권, 인구배분, 부문별 계획으로 구성됨

- 부문별 계획에는 토지이용, 교통·물류, 공공시설, 산업개발, 주거환경, 환경보전, 경관 및 미관, 여가, 공원녹지 등이 있음

<표 1> 도시계획의 종류·성격 및 주요 내용

구분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계획 성격	○ 20년단위 공간구조와 광역시설 중심의 정책계획 ○ 광역도시권의 장기 발전방향 제시	○ 20년단위 물적·비물적·종합적인 정책계획 ○ 당해 도시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 10년단위 중기적 물적 계획 ○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민 등 구축)	○ 도시계획을 구체화하는 물적 계획 ○ 도시 기능과 미관 증진, 양호한 환경 확보 등을 목적
계획 구역	○ 광역도시권 -인접한 20이상의 시 또는 군으로 지정	○ 시의 행정구역 -군은 건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가능	○ 도시계획구역 -시,읍 등 법제30조에 의해 지정된 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구역중 일 부지역
계획 내용	○ 계획목표와 전략 ○ 현황 및 특성 ○ 공간구조 개편구상 ○ 부문별계획 -광역토지이용 -여가공간 및 녹지 -환경보전, 방재 -광역교통 -광역공급 이용시설 ○ GB조정계획 ○ 집행 및 관리계획 * 계획수립지침 중심	○ 목표와 지표설정 ○ 공간구조 설정 ○ 생활권, 인구배분 ○ 부문별 계획 -토지이용 -교통·물류 -공공시설 -산업개발 -주거환경 -환경보전 -경관 및 미관 -여가, 공원녹지 등 * 계획수립지침 중심	○ 종합(재정비)계획 -용도지역·지구 -도시기반시설 -도시개발계획 -도시경관 등 종합 ○ 부문적 계획 -필요 부문계획 * 도시계획안 구성 -도시계획안 -계획도서 -계획설명서(환경성 검토결과 등) * 계획수립지침 중심	○ 지역·지구 세분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등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 경관, 교통처리 ○ 생물서식공간보호, 물과 공기순환 ○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등 * 법령내용 중심
수립 입안 권자	○ 도지사(같은 도) ○ 시·도지사 공동 ○ 건교부장관과 시·도지사 공동 ○ 건교부장관	○ 시장·군수	○ 시장·군수 ○ 도지사(광역계획) ○ 건교부장관(국가계획)	○ 시장·군수
승인 결정 권자	○ 건교부장관	○ 건교부장관	○ 시·도지사 ○ 건교부장관(국가계획, GB 등)	○ 시·도지사

■ 도시관리계획

-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임
-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
- 도시관리계획에서는 국토건설종합계획, 광역개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개발 지표를 제시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4. 국토이용관련 계획의 문제점

4.1. 국토건설종합계획

- 국토건설종합계획은 물리적 공간계획 기능과 함께 경제, 사회발전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기능이 제한되어 있는 계획부서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 계획은 공간구조 형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토지이용 및 개발에 대한 공간전략적 측면을 중시하지 않고 있어 공간계획으로서 예방 및 유도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국토의 개발 및 토지이용에 대한 통일적인 의사를 형성하고 각 부문간 사업이나 계획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종합조정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위계획간의 경합이나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실현시킬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

4.2. 국토이용계획

■ 이원화된 토지이용체계

- 국토이용계획은 명목적으로는 전국 단위의 계획으로서 전국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5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에 대한 관리는 도시계획에 의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해 그리고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계획에 의해 각각 분리되어 관리되는 이원화된 구조임
-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법정 도시계획에 의해 토지이용의 용도 및 밀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토지이용규제가 이루어지는 반면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기본적인 용도분류만이 이루어질 뿐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공간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토지이용의 용도 및 밀도 등에 관한 실질적인 토지이용규제 사항이 법률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함

■ 계획기능의 결여

- 국토이용계획은 용도지역·지구만을 지정할 뿐 용도지역·지구 지정 및 변경의 근거가 되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공간계획 기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함
- 이는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지구가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을 수용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용도지역·지구내 행위제한도 개별법에 의한 행위제한에 의제하여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그러므로 국토이용계획 상의 용도지역·지구 지정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
- 결국 국토이용계획은 용도지역·지구를 구분, 지정할 뿐 이외의 근거가 되는 계획기능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용도지역·지구내 행위제한을 위한 구체적인 집행수단이 미흡하여 국토이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체계가 매우 불완전한 것임을 의미
- 뿐만 아니라 개별법에 의한 행위제한 규정에 있어 이외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법의 약점을 악용한 각종 개발사업이 자행되고 있어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어렵게 함

■ 작은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거시적 지침 없이 매년 수시로 국지적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다른 개별법·특별법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의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그 결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개발가능지역으로 되어 국토이용계획의 기본체계와 용도지역 지정의 본래의 의미를 반감시킴. 이는 무계획적이고 파행적 개발을 초래하여 환경파괴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선계획-후개발원칙의 무시

-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지구는 기본적으로 자체 토지적성평가 등에 의거하여 결정되기도는 각종 개별법에 의해 지정되는 지역·지구·구역 등을 의제하여 결정되고 있음
- 각종 개발관련법에 근거하여 지정되는 지역·지구·구역 및 시설 등에 의해 국토이용계획법상의 용도지역·지구가 결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개별법이 국토이용관리법보다 상위법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국토이용계획에 의해 개발이 이루어지는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오히려 국토이용계획이 결과적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음

4.3. 도시계획

■ 해당도시에 대한 적합한 환경문제 인식의 결여

- 최근들어 도시계획의 내용을 보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를 도시차원에서 해결하고자 계획의 목표에서부터 푸른도시 가구기, 그린플랜, 청정도시, 생태도시, 그린시티,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 등의 용어를 구사하여 환경적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아직 전지구적 차원 혹은 국가차원 더 나아가 광역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와 국지적인 도시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고서 오

직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는 용어만을 차용하여 계획의 목표로 설정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환경목표의 구현을 위한 자기완결적 구조의 미확립

- 환경성 구현 목표가 계획 전반에 걸쳐 논리적으로, 내용적으로, 그리고 계획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지 못하고 있음
- 환경보전 실현을 위한 추상적인 목표가 일련의 연속적 단계인 현황분석, 계획지표 설정, 부문별 계획, 집행계획에서 구체적이고도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나야 함에도 목표와 실천수단간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즉, 계획의 자기완결성을 갖추지 못함
- 이에 비해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의 지향체계는 목표·수단·집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기완결적 구조를 취하고 있음

■ 환경부문 지표의 현실 부적합성과 중요성 간과

- 환경부문의 지표는 전체 계획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거나 개발부문의 지표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지표로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나마 환경지표는 환경기초시설의 건설에 국한된 개발관행시대의 계획지표를 답습하고 있음
- 자연생태계 및 도시 비오름 등 생태환경의 창출과 보전, 경관의 육성과 보전, 도시 쾌적성의 창출, 녹지체계의 형성 등을 위한 적극적인 지표개발이 필요함에도 이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고 또 지표가 일부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부문별 계획에서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함

■ 도시환경분석의 미흡

- 계획대상 도시의 환경현안은 환경기초조사, 환경관련 요소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주민들의 의식조사, 해당도시의 환경 수용능력 파악을 위한 환경적성평가 등 다양한 조사·분석작업을 통해서 도출됨. 하지만 계획수립시 환경기초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분석 항목들은 기상, 자연지리, 오염현황 등에만 국한되어 다양하지 못함
- 일부 이루어지는 환경조사·분석의 단위가 정밀하지 못하고 도시의 환경특성 도출을 위한 환경관련 항목들간의 연관관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함

- 주민에 대한 환경의식조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민의 대표성,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의식조사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의 우선 순위 파악과 부문계획 내용에 반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도시계획의 기초자료인 환경지도가 작성되지 못했고 조사자료들이 전산화되지 않아 환경보전 용도의 지정을 위한 환경적성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함

■ 도시공간구조 설정에서의 문제점

- 관행적으로 기본구상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주로 도시성장축 또는 교통축을 포함하는 개발축의 설정, 생활권 및 도시세력권 구분,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심 및 부도심의 설정, 개발적지 분석에 의한 토지이용구상 등임.
- 최근 들어 녹지축 또는 보전축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축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능이 단지 개발지대에서 제외된 유보지역이나 녹지지역을 형식상 연결하여 도식적으로 보여 주는 것에 그치고 있음
- 이 결과 개발축에 대한 보전축의 우선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환경계획의 단위로서 환경관리권에 대한 접근이 미흡
- 도시전체의 녹지에 대한 환경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대보전을 요하는 녹지와 이용이 가능한 녹지를 과학적으로 분류하지 못함

■ 부문별계획에서의 문제점

- 환경부문계획이 개발의 사전 조정자로서 타부문계획에 대한 사전 파악효과가 미흡하고 개발영향을 사후적으로 수렴하는 기능이 약함
- 환경부문계획과 타부문계획들간의 정보소통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여 개발의 영향과 사전조정 그리고 토지이용 통제를 위한 계획부문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함
- 환경부문계획에는 오염원의 공간적 분포와 영향 예측, 그리고 그것의 관리계획이 없으며 보전위주의 녹지계획으로 인해 녹지의 다차원적 기능 중에서 시민여가 장소로서의 기능을 소홀히 다루고 있음
- 오염매체 및 환경시설 중심으로 접근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도시 비오톱의 보존·창출·복원·정비에 대한 계획내용이 없음